

No. 2013-41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10. 14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경제이슈
: 일본 정부 펀드 확대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① 일본경제지표

□ 주간 시황지표

- 엔화환율 : 미국의 재정문제 협의 전망으로 약세
- 장기금리 :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에 따라 상승세

구 분	10.7(월)	10.8(화)	10.9(수)	10.10(목)	10.11(금)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달러당)	97.12	96.75	97.36	97.67	98.29
엔화의 대원화 환율(100엔당)	1,102.30	1,106.69	-	1,101.02	1,095.81
닛케이평균주가(종가)	13,853.32	13,894.61	14,037.84	14,194.71	14,404.74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 연리%)	0.640	0.655	0.650	0.655	0.655

□ 주요 거시경제지표

- 2013년 8월 경상수지는 1.6천억엔 흑자로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흑자 폭은 감소
- 2013년 8월 무역수지는 9.6천억엔 적자로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 * 수출물량은 2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엔저에 의한 연료수입가격 상승 영향
 - * 對한국 무역수지는 1.8천억엔 흑자로 전월보다 흑자폭이 확대

구분	2012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실질GDP증가율(연율,%)	1.2(2.0)	4.1(P)			3.8(P)			-	-	-
수 출(천억엔)	639(637)	48	53	63	58	58	61	60	58	-
수 입(천억엔)	721(707)	64	61	66	67	68	62	70	67	-
對한국 수출	49.7(49.1)	4.01	4.25	5.21	5.07	4.61	4.54	4.77	4.59	-
對한국 수입	32.8(32.4)	3.12	2.92	2.81	2.58	2.85	2.57	3.04	2.78	-
직접투자(억달러)	(1,223)	234			331			-	-	-
對한국 투자	(40)	7.7			9.1			-	-	-
소비자물가(전기비,%)	▲0.2(0.0)	▲0.3	0.1	0.3	0.3	0.2	0.0	0.1	-	-
실업율(%)	(4.4)	4.2	4.3	4.1	4.1	4.1	3.9	3.8	-	-
경상수지(천억엔)	42.9(47)	▲3.6	6.4	12.5	7.5	5.4	3.4	5.8	1.6	-
엔화 對미달러 환율	82.9(80.1)	89.2	93.2	94.8	97.7	101.0	97.4	99.7	97.9	99.2
對원화(100엔)	(1,413)	1,197	1,166	1,161	1,148	1,100	1,165	1,130	1,142	1,095
외환준비고(기말, 천억달러)	12.5(12.7)	12.7	12.6	12.5	12.6	12.5	12.4	12.5	12.5	12.7
국채금리(10년, 연리%)	0.560	0.740	0.665	0.560	0.600	0.860	0.855	0.795	0.720	0.680

주1.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은 기간평균, 자료: 닛케이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3. (P)는 2차 속보치(개정치)

□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report watching site)

- 『일본기업의 M&A는 효율적인 투자행동인가?』 경제산업연구소, 10월8일
*출처: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summary/13100001.html>

② 주간경제이슈 : 일본 정부의 펀드 확대

□ 2013년에 6개 정부 펀드 설립

- 일본정부가 자금을 조성하여 기업에 출자하는 정부펀드가 확대되고 있는데, 2013년에만 6개의 펀드를 설립
 - 일본 정부에서 조성한 펀드는 총 9개로 총 5조 엔 규모
- 일본정부의 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기업지원책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개별 산업육성을 목표로 한 사례가 많음
 - 이에 따라 민간 주도의 경제활동이 왜곡되지 않도록 펀드의 해산시기를 정하는 등 출구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음

〈일본정부의 주요 펀드〉

	자금규모	투자대상	비고
농림어업성장산업화 지원기구	5년후 2,000억엔	식품가공 및 판매에 종사하는 농림수산업자	아베정부가 설립한 정부펀드
환경부동산보급촉진기구	350억엔	내진성이 큰 빌딩, 시설	상동
일본정책투자은행·경쟁력강화펀드	최대 3,000억엔	대기업의 휴면기술 등	상동
쿨 저팬추진기구	600억엔	패션, 게임, 전통공예품	상동
민간자금 등 활용사업추진기구	최대 3,150억엔	공항, 하수도사업 등의 운영권 등	상동
관민이노베이션프로그램	1,000억엔	동경대, 교토대 등의 첨단기술	기존 주요 펀드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5,191억엔	중소기업 약 3,000개사	상동
산업혁신기구	최대 약 2조엔	저팬디스플레이 등 약 50건	상동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	약 1조 2,000억엔	일본항공 등 과대한 채무를 안고 있는 기업	상동

자료 : 닛케이신문(2013.10.8)

- 일본정부는 2013년에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 등 3개의 정부 펀드를 설립
 - 10월 이후 3개의 펀드를 신설할 계획으로 정부보증을 포함한 자금규모는 종래보다 약 30% 증가한 4조 7,000억 엔
- 최근 일본정부 펀드의 상징적인 것이 11월 설립 예정인 쿨저팬추진기구인데, 600억 엔 기금 중 500억 엔을 정부가 출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형은행과 증권회사, 소매업자들이 출자
 - 게임회사에서 과자업체에 이르기까지 일본문화의 해외홍보 관련 기업군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보조금 성격이 강한 아베정부의 펀드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잇따라 설립된 종래의 정부 펀드는 위기대책 성격이 강했음
 - 일본항공의 재건을 지원한 기업재생지원기구, 전기관련 대기업들의 비채산부문의 통합을 지원했던 산업혁신기구는 공공교통, 고용 유지, 기술유출방지 등을 목표로 한 것이었음
 - 기구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위기 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사례는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
- 이에 반해 아베정부가 설립한 펀드는 첨단기술과 일본문화의 홍보 등 성장전략에 중점을 둔 보조금의 성격이 강함
 - 보조금 지급은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이긴 하나 장래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펀드에 대한 투융자는 재정수지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펀드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재정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 펀드조성 시 투자하는 재정투자의 총액은 3,190억 엔으로 최근 3년 합계액의 2.7배로 확대
- 미래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사업은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는데, 실패하게 되면 세금으로 손실을 메꾸어야 되는 공적자금은 본래 이러한 사업에는 어울리지 않으며, 일본판 낙하산 인사의 온상이 되기 쉽고 전문 인력도 동원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닛케이 신문은 지적
- 벤처엔터프라이스센터(재)에 따르면, 일본 국내 벤처캐피털의 2011년도 투융자액은 1,240억 엔으로 5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미국의 1/20에 그치고 있음
 - 민간의 리스크머니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점도 정부펀드의 확대에 이어지고 있는 이유임
- 물론, 평상시에 개별 기업들에게 참여를 강요하게 되면, 일본기업에 대한 출자나 매수를 노리는 해외펀드 및 해외기업과의 경합도 증가하게 된다는 지적
 - 그 결과 해외투자자들의 대일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아베 정권이 목표로 설정한 대일 투자배증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판단임

□ 정부펀드의 확대에 따른 정부부문의 비대화 등 부작용 방지책

- 일본정부는 9월 정부 펀드의 투자를 체크하는 운용지침을 제정
 -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정부펀드는 원래 정부가 투자해야 할 사업을 정밀 심사하여, 투자 리스크나 수익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일본정부는 34개의 점검항목을 만들어 분기별로 펀드의 운영상황을 검증할 방침이나, 감시체제가 기능하지 않으면 정부부문의 비대화로 이어져, 민간주도의 경제활동을 왜곡시킬 위험도 내포

□ 역할을 마친 정부펀드의 조기해산 등 출구전략 중요

- 아베정부는 정부펀드를 성장 추진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의도이나, 위기 시 효과적인 정부 부문의 출자활동도 평상시에는 부작용이 큰 만큼, 역할을 끝낸 정부펀드의 조기 해산이 중요하다고 닛케이신문이 주장
 - 펀드 해산시기(5~20년)를 제대로 지키거나, 경제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해산을 앞당기는 출구전략이 중요
 - 2009년 설립된 기업재생지원기구는 경영위기에 빠진 일본항공에 출자했는데, 일본항공이 2012년 재상장함으로써 약 3,000억 엔의 매각이익을 내자, 역할을 끝낸 재생기구의 해산을 요구하는 여론도 있었음
 - 그러나 일본정부는 2013년 재생기구를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재건을 지원하는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로 전환
- 아베정부의 정부 펀드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경제대책의 성격이 강함
 - 경기가 본격 회복하여 민간 기업이 200조엔 이상의 유동성자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 만큼, 정부펀드가 민간시장에 눌러앉지 않도록 빠져나갈 시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

3 경제정책동향

□ 일본정부, TPP교섭에서 일부 농축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검토

- TPP 교섭에서 일본정부가 쌀과 설탕 등 이른바 성역으로 취급하고 있는 중요 5개 분야를 대상으로 관세철폐대상품목 선별을 검토하기로 하고, 철폐 시 그 영향을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
 - 난항중인 교섭을 타개하기 위해 관세철폐 예외품목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임
 - 5개 분야 586개 품목 중 가공미 등 부차적인 상품 223개 품목이 철폐대상이 될 전망
- 10월 8일, 발리에서 개막된 12개 TPP교섭 참가국의 정상회담에서 당초에는 큰 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명기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불참으로 성명문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며, 금년 중 타결이 어려울 전망
- 일본은 교섭 진전을 위해 관세자유화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제까지의 교섭에서 관세철폐품목의 비율을 나타내는 자유화율을 약 80~90%로 제안했으나, 참가국들 가운데 최저수준이라는 이유로 비판이 제기
- 일본 국내에서는 중·참의원 양원의 농수산물위원회가 쌀, 밀, 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5개 분야는 관세철폐에 응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
 - 일본이 각국에 낮은 자유화율을 제시해온 것은 5개 분야를 성역으로 취급해왔기 때문
 - 5개 분야의 관세분류상 품목 수는 합계 586개이며 총 관세품목은 9,018개 품목으로 5개 분야의 관세를 모두 유지하는 경우 자유화율은 93.5%
 - 일본 정부는 586개 품목 중 구체적으로 어느 품목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해옴
 - 자민당 니시카와 고야(西川公也) TPP대책위원장은 7일 국내조정을 본격화할 뜻을 비치는가 하면,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간사장도 관세세목가운데 철폐가능성을 검토할 것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함
- 관세철폐의 초점은 5개 분야 중 부차적인 상품을 나타내는 조정품으로 불리는 품목인데, 쌀가루와 후레이크 등 가공미, 우설 등을 포함, 전부 223개 품목으로 5개 분야 전체 관세품목의 40%정도를 점함
 - 그중에서도 요리용 쌀과 고기 부스러기 등 수입실적이 적은 품목도 다수 있음
 - 5개 분야의 전 품목에 관세를 철폐하는 경우 96%로 상승하게 되어, 국내 생산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
 - 5개 분야 외에도 수산물, 가죽제품 등 생산지역과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품목도 있어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

4 일본기업동향

□ 기업설비투자 완전한 회복세

- 일본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일본 내각부가 10월 10일 발표한 8월 기계수주통계에 의하면, 민간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선박과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의 수주액이 전월에 비하여 5.4% 증가한 8,193억엔으로 2008년 9월 리먼 쇼크 이후 최대치를 기록
 - 그 결과 2013년 3분기 실적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더라도 2분기 연속 전기 대비 상회할 가능성이 큼
- 설비투자 내역을 보면, 선박과 전력을 제외한 비제조업이 전월비 6.2% 증가한 4,910억 엔으로, 특히 금융·보험업의 시스템 투자와 운수·우편업의 철도차량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를 견인
- 이제까지 비제조업에 비하여 투자가 저조했던 제조업에서도 투자증가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제조업의 수주액은 전월비 0.8% 증가한 3,213억 엔으로 증가폭은 소폭이나 2005년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하기는 처음
 - 수주 규모가 100억 엔을 상회하는 석유·석탄분야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와 기계 등 수주액이 큰 가공 산업이 안정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도 제조업의 증가세를 지탱해주고 있음
- 한편, 현재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내년 4월 소비세 증세를 앞둔 가수요의 움직임도 있다는 지적

□ 국내 일감이 줄어든 중소기업들 동남아 진출의욕 높아져

- 일본 중소기업들의 동남아 진출의욕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2008년 리먼 쇼크를 계기로 한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아시아에 주목하고 현지조달도 증가하고 있음
 - 이는 거래처의 해외진출로 일감이 줄어든 중소기업들도 생존을 위한 아시아 쉬프트(Asia Swift)를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반영

- 경제산업성의 기업활동 조사에 의하면, 일본 제조업의 해외자회사 수는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년간 2,000개 이상 증가, 25,000개를 웃돌고 있는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약 60%를 점함
-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중소기업들도 증가하고 있음
 - 국제협력은행(JBIC)이 2012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사업 대상지역으로 인도네시아를 꼽은 중소기업이 16포인트 상승한 41%에 달하며, 태국도 5포인트 증가한 34%
 - 거래처의 해외생산 및 현지조달이 진전되는 가운데 일본 국내 일감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최대 이유
- 일각에서는 수요업체들의 해외이전으로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 국내에 중소기업들도 더 이상 머물러서는 고용뿐 아니라 기술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미 동남아에 진출한 기업들 가운데는 모노즈쿠리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동남아 현지에서 재기·부활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일본 중소기업의 모노즈쿠리가 적어도 해외에 전수되고 현지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는 지적
- 그러나 일본 국내에 모노즈쿠리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
 - 일본 정부·여당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세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보조금 상한도 늘릴 방침
 - 중소기업의 일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 일본금형공업회는 최종제품 생산기반을 일본 국내에 잔류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5 한국관련워치

□ 도레이, 한국에 고기능 수지생산 공장 신설

- 고기능 수지분야의 탑 메이커인 도레이가 1,900억 원을 투자하여 자동차 및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생산 공장을 한국에 신설하기로 발표
 - 해외 공장 신설은 최초로 해외 및 일본 국내를 합친 생산능력은 현재 보다 50% 증가한 27,000톤
 - 금속을 대체함으로써 부품의 경량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고기능 수지제품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2016년 4월 가동예정인 열과 약품에 강하여 변질되기 어려운 고기능 수지 PPS(Poly Phenylene Sulfide)의 생산 설비로서 주로 자동차의 축전기와 전기·전자기기의 커넥터로 사용
- 신설되는 한국공장에서는 수지에서 컴파운드(혼합물)이라 불리는 성형 재료에 이르기까지 일관생산
 - 성형재료의 가공설비는 수지생산에 앞서 2015년 10월 가동예정인데, 한국은 원재료를 값싸게 조달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일본에 비하여 광열비와 노임이 싸다는 이점이 있음
- 도레이는 금년 6월 동 수지를 생산하는 일본 동해공장(아이치현 동해시)의 연산능력을 40% 확대
- 차세대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로 고기능 수지의 컴파운드가 연평균 8% 이상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도레이는 2016년 세계시장점유율을 현재보다 5% 증가한 약 33%로 높인다는 계획